

KIEP, 4차 산업시대의 한·중 협력 방안 모색

☞ 박종호 기자 | Ⓞ 승인 2018.10.31 16:14



KIEP가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산업인터넷 등의 분야에서 한중 협력 방안 모색했다. (사진=KIEP)

[데일리비즈온 박종호 기자]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4차 산업혁명 분야에서 한·중 양국의 기술적 우위에 기반한 상호보완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KIEP는 30일 서울 웨스틴 조선호텔에서 '중국의 지역별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중 협력'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했다. 중국사회과학원 및 주요 지역의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석한 이번 세미나는 중국의 4차 산업혁명 대응전략과 한·중 양국의 협력방안을 모색하고 주요 지역의 인공지능(AI), 스마트시티, 산업인터넷, 빅데이터 분야의 발전현황과 구체적인 응용사례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평섭 KIEP 세계지역연구센터 소장은 개회사를 통해 "뉴노멀에 진입한 이후 중국은 국가 경쟁력 확보와 발전방식의 전환 촉진, 신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4차 산업혁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양 소장은 "그러나 지역별로 산업생태계와 혁신능력, 지방정부의 정책 등이 달라 4차 산업혁명 추진전략이 상이하기 때문에 우리가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된 협력전략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양국이 중점을 두고 있는 스마트시티, 스마트헬스케어, 인공지능, 스마트팩토리 등의 분야에서 서로의 기술적 우위

요소를 보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쥘 중국사회과학원 공업경제연구소 주임은 1세션의 첫 번째 발표자로 나서 "스마트화·디지털화·네트워크화를 특징으로 한 4차 산업혁명은 향후 중국의 글로벌 제조업 경쟁력과 경제발전 방향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며 "중국은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중국제조 2025' 전략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허주임은 "한·중 양국은 향후 기초 과학기술 및 기술표준 분야에서의 협력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상훈 산업연구원 해외산업연구실장은 "4차 산업혁명은 생산-소비 가치사슬의 단순한 전이(Transition)보다는 재편(Transformation)을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측했다. 김 실장은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각 국가는 사회적·경제적으로 서로 상이한 발전단계에 놓여 있으므로 국가 간 협력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 역시 국가별로 다른 관점에서 도출돼야 한다"며 "기존의 기술 및 산업과의 연계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협력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왕시원 베이징 화샤공업인터넷 스마트기술연구원 원장은 2세션 발표에서 중국 국가 차원에서 인공지능산업 육성 배경을 소개하고, 베이징의 인공지능 발전 정책과 그 특징을 분석했다. 그는 인공지능 분야 가운데 △AI 제품 △AI 핵심 기반기술 △스마트제조 등을 한·중 간 협력이 유망한 분야로 제시했다.

양쥘 알리클라우드 연구센터 전략디렉터는 이어 중국의 대표적인 스마트시티 모델인 저장성 '시티브레인(City Brain)'의 도시 관리 사례를 소개하고, 향후 도시 관리를 위한 중요한 기술은 스마트 데이터 운영기술(intelligent data operating)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빠른 기술발전으로 인해 향후에는 네트워크 내 데이터를 활용한 도시 계획, 관리, 발전이 실시간으로 이루어지는 진정한 의미의 스마트시티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장위안위안 상하이사회과학원의 응용경제연구소 부주임은 상하이의 최근 산업인터넷 발전 정책의 주요 내용과 특징, 당면 과제를 소개했다. 이어 한·중 간 협력을 위해 △자동차, 반도체, 로봇, 섬유 등 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클러스터 간 협력 추진 △인적 교류 △정례화된 교류협력 메커니즘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번 세미나는 두 나라의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그 결과 지역별 혁신능력과 정책, 산업생태계 고려한 차별화된 협력 전략의 필요성 등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컸다는 평가를 받는다.

저작권자 © 데일리비즈온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종호 기자